

# 2025~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

2025. 9.



기획재정부  
Ministry of Economy  
and Finance

# 순서

I. 국가재정운용계획 의의 .....	1
II. 2025~2029년 경제여건 및 전망 .....	2
III. 2025~2029년 재정운용 방향 .....	6
IV.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.....	10
V. 재정혁신 추진방향 .....	15
[참 고]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.....	21

---

## I . 국가재정운용계획 의의

---

- 중기적 시계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
-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으로 대내외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·보완
- '04년 최초 수립('04~'08년 계획) 이후 '07년부터 국회에 제출
- 국가재정법 개정('14년)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제출 30일전까지 수립방향 국회 보고 의무화(국가재정법 제7조 제9항)
- 관계부처,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
-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,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단 및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진행

### <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>

-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(기획재정부 → 각 부처, '24.12월)  
\* 각 부처는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('25.1월말)
- 재정운용전략위원회,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('25.1월~)
-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단 구성·운영 ('25.3월~)
- 분야별·지역별 예산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('25.4~8월)
- 제3차 비상경제점검TF, 새정부 재정운용방향 보고 ('25.7.30.)
-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 ('25.8.1.)
- 재정정책자문회의, 관계부처·지자체·전문가 의견수렴 ('25.8.22.)
-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('25.9.3.)

## II. 2025~2029년 경제여건 및 전망

### 1 대내외 경제 여건

#### 세계경제

- (2025년) 美 관세충격 등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 지속
  - 상반기는 관세유예 前 선수요 등으로 비교적 선방했으나, 관세영향이 점차 본격화되며 성장·교역 둔화 예상
    - \* '24→'25년 성장전망(% IMF): (전세계)3.3→3.0 (美)2.8→1.9 (中)5.0→4.8 (유로존)0.9→1.0
    - 다만, 주요국 경기부양책, 금리인하 기조는 둔화세 완화 요인
  -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,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대체로 상승세 완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, 관세 여파 등 불확실성 상존
    - \* '24→'25년 물가전망(% IMF): (전세계)5.2→3.6 (美)3.0→2.5 (中)0.2→0.1 (유로존)2.4→2.3
- (2026년 이후) '26년은 관세 등 하방요인 잔존, 이후 성장·물가는 대체로 안정되는 가운데,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 등 리스크 잠재
  - '26년은 관세영향 지속 등으로 글로벌 성장·교역은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으나,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 전망
    - \* 글로벌 교역량(% IMF, 상품+서비스): ('24)3.5 → ('25<sup>e</sup>)2.6 → ('26<sup>e</sup>)1.9
  -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AI·디지털·탄소중립 전환 등 글로벌 기술·산업환경 변화 가속화

세계경제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(%)

		'25	'26	'27	'28	'29	'30
세계 성장률		3.0	3.1	3.2	3.2	3.2	3.1
- 선진국	성장	1.5	1.6	1.7	1.7	1.7	1.7
	물가	2.5	2.1	2.0	2.1	2.1	2.1
- 신흥국	성장	4.1	4.0	4.2	4.1	4.1	4.0
	물가	5.4	4.5	4.1	4.0	3.9	3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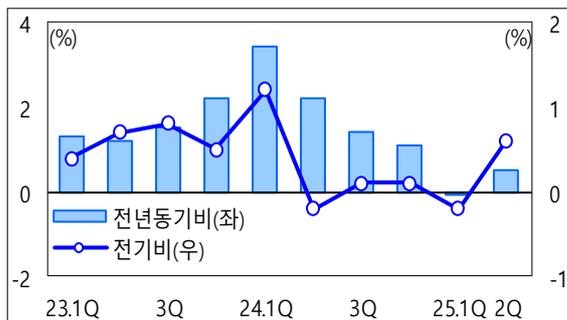
\* 출처 : World Economic Outlook(IMF, '25~'26년 전망치는 7월, 이후 전망치는 4월 발표 기준)

## 국내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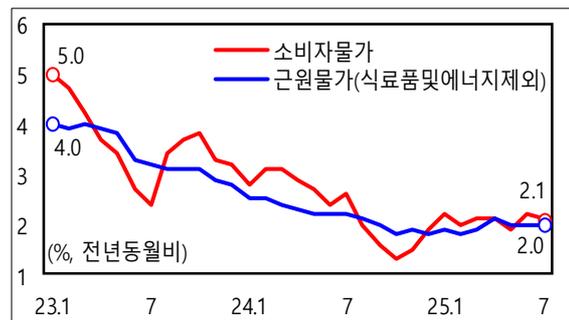
- (2025년) 성장은 그간의 부진 흐름에서 벗어나 하반기 회복세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, 물가는 물가안정목표(2%) 내외 전망
  - 하반기에 수출은 美 관세영향으로 둔화 가능성이 있으나, 추경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며 소비 중심 성장세 예상
    - 다만, 향후 반도체·의약품 품목관세 부과 등은 리스크 요인
  - 물가는 2% 내외에서 등락 중이나, 먹거리 물가 등이 높고 이상기후,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 상존

\* 소비자물가(전년동기비, %): (25.1)2.2 (2)2.0 (3)2.1 (4)2.1 (5)1.9 (6)2.2 (7)2.1

GDP 실질성장률



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



- (2026년 이후) '26년은 '25년보다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나,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해 정책노력이 긴요
  - '26년은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 가운데 소비 회복, 건설부진 완화 등으로 내수 중심 성장세 전망

\* '25→'26년 한국 성장전망(%): (KDI<sup>8월</sup>)0.8→1.6 (IMF<sup>7월</sup>)0.8→1.8 (한은<sup>5월</sup>)0.8→1.6

-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구현 위한 정책노력 가속화 필요

## 재정수입

- (국세수입)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국세수입 여건도 개선되는 가운데, 중기적으로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세 유지 예상
  - '25년 국세수입은 '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이다, 경기회복 속도 등에 따라 증가폭은 불확실성 상존
  - '26년 이후에는 내수 중심 경기회복 등에 따라 국세수입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
- (국세외수입)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, 경기 여건에 영향을 받는 법정 부담금 등은 변동 가능성도 존재
  - 기금수입은 現 상승 추세에 따라 지속 증가할 전망
    - 국민연금기금,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보험료 요율 인상,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지속 증가 예상
  - 세외수입은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

## 재정지출

- 중장기적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, 세계 무역질서 근본적 변화, 양극화 심화 등 대내외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 전망
  - 초고령사회 진입('24.12월)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, 청년·지역·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 요구
  - AI 대전환, 신산업 혁신 등 우리 경제의 대혁신을 위한 투자와 재해 예측·예방·대응, 민생범죄 근절 등 국민 안전 지원도 필요
-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 재정운용, 지출 효율화 등 재정혁신 필요성도 높아지는 상황
  -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낭비성·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,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 추진
    - 의무지출도 경제·사회구조 변화 감안하여 제도를 개편하고, 반복·부정수급 등 지출누수 최소화
  -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초혁신경제 실현,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공동체 구축 등 핵심과제에 과감히 투자

'24~'28년 계획 대비 '25~'29년 부처요구

(단위 : 조원, %)	'24	'25	'26	'27	'28	'29	증가율
▪ '24~'28년 계획(A)	656.6	677.4	704.2	730.3	756.2		3.6
▪ '25~'29년 부처요구(B)*		673.3**	777.6	835.4	880.2	923.5	8.2
▪ 계획대비 추가요구(B-A)	-	△4.1	73.4	105.1	124.0	-	-

\* 중기사업계획서 부처요구('25.1월말)    \*\* 국회 확정 본예산

---

### Ⅲ. 2025~2029년 재정운용 방향

---

#### 1 재정운용 기본방향

---

##### ① 성과 중심 재정운용으로 경기회복·경제성장 적극 뒷받침

---

- 고성과 부문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'성과 중심' 재정운용으로 초혁신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 회복·성장을 적극 지원
-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서민·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지원, 소비진작·지역경제 활성화 등 신속한 경기회복에 총력
- AI 등 신산업 육성, 인구변화 대응·양극화 완화·탄소전환·국가균형성장 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에 재정을 선택·집중 투자

##### ② 재정-경제 선순환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

---

-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재정투자 성과를 극대화하여 경제성장 및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선순환 구현
- 저성과·관행적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, 불요불급한 비과세·감면 정비 등 재정여력 확보 노력 강화

##### ③ 재정운용 효율성 및 신뢰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 지속

---

- 성과평가 예산환류 강화, 예타제도 개편 등 재정관리 효율화 및 국유재산·민간투자 등 공공·민간자원 활용 확대
- 국민참여 확대,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 및 재정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정의 신뢰성·투명성 확보

## 재정수입

- 재정수입(총수입)은 '25~'29년 기간 중 연평균 4.3% 증가할 전망
- 국세수입은 '25~'29년 기간 중 연평균 4.6% 증가할 전망
    - '25년 기업실적 호조, 내수중심 경기회복 및 세수기반 확충 등에 따라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 전망
  - 세외수입은 '25~'29년 기간 중 연평균 1.9% 증가할 전망
  - 기금수입은 '25~'29년 기간 중 연평균 4.2% 증가할 전망

< 중기 재정수입 전망 >

(단위 : 조원, %)

	'25년*		'26년	'27년	'28년	'29년	연평균 증가율**
	본예산	2회추경					
▣ 재정수입	651.6	642.4	674.2	705.0	733.7	771.1	4.3
○ 국세수입	382.4	372.1	390.2	412.1	434.1	457.1	4.6
○ 세외수입	36.3	37.6	37.4	36.7	37.0	39.1	1.9
○ 기금수입	232.8	232.8	246.6	256.2	262.6	274.9	4.2

\* 국회 확정예산 기준 \*\* '25년 본예산 대비

☞ '25년 2회추경 대비 연평균 증가율(%): 총수입 4.7(국세 5.3, 세외 1.0, 기금 4.2)

- 조세부담률은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

< 중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>

(단위 : %)

	'25년*		'26년	'27년	'28년	'29년
	본예산	2회추경				
▣ 조세부담률	19.0	18.6	18.7	18.8	19.0	19.1
▣ 국민부담률	26.5	26.1	26.2	26.6	26.8	27.0

\* 국회 확정예산 기준

## 재정지출

- 재정지출(총지출)은 '25~'29년 기간 중 연평균 5.5% 수준으로 관리
  - '26년은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 대폭 상향하여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
  - '27년 이후는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'29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
- 의무지출은 '25~'29년 기간 중 연평균 6.3% 증가
  - 저출생·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·의료 등 복지지출 급증, 국채이자 부담으로 의무지출 소요는 지속 증가 전망
- 재량지출은 '25~'29년 기간 중 연평균 4.6% 증가
  -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 실현,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공동체 구축, 국민안전 등을 위한 재정투자 지속
  -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는 집중투자하고, 낭비성·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'성과 중심 재정운용' 병행

### < 중기 재정지출 계획 >

(단위 : 조원, %)

	'25년*		'26년	'27년	'28년	'29년	연평균 증가율
	본예산	2회추경					
▣ 재정지출	673.3	703.3	728.0	764.4	802.6	834.7	5.5
(증가율)	(2.5)	(7.1)	(8.1)	(5.0)	(5.0)	(4.0)	
○ 의무지출	365.0	364.8	388.0	415.1	441.3	465.7	6.3
(비중)	(54.2)	(51.9)	(53.3)	(54.3)	(55.0)	(55.8)	
○ 재량지출	308.3	338.4	340.0	349.3	361.3	369.0	4.6
(비중)	(45.8)	(48.1)	(46.7)	(45.7)	(45.0)	(44.2)	

\* 국회 확정예산 기준

##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

- (재정수지) 관리재정수지는 '25~'29년 기간 중 GDP 대비 △4%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
- '25년 △4.2%(추경 기준, 본예산 △2.8%)에서 '29년 △4%대 초반(△4.1%) 수준 전망
  - ※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\*는 '25년 △2.3%(추경 기준, 본예산 △0.8%)에서 '29년 △2%대 초반(△2.1%)으로 관리
- \* 통합재정수지 = 관리재정수지 + 사회보장성기금 수지
- (국가채무) 국가채무비율은 '25년 49.1%(추경 기준, 본예산 48.1%)에서 '29년 50% 후반(58.0%) 수준으로 관리

### <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>

(단위 : 조원, %)

	'25년*		'26년	'27년	'28년	'29년
	본예산	2회추경				
▣ 관리재정수지	△73.9	△111.6	△109.0	△115.4	△128.9	△124.9
(GDP대비)	(△2.8)	(△4.2)	(△4.0)	(△4.1)	(△4.4)	(△4.1)
※ 통합재정수지	△21.7	△60.8	△53.8	△59.4	△68.9	△63.6
(GDP대비)	(△0.8)	(△2.3)	(△2.0)	(△2.1)	(△2.3)	(△2.1)
▣ 국가채무	1,273.3	1,301.9	1,415.2	1,532.5	1,664.3	1,788.9
(GDP대비)	(48.1)	(49.1)	(51.6)	(53.8)	(56.2)	(58.0)

\* 국회 확정예산 기준

## IV.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

### < 기본 방향 >

- ◇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한 경제 대혁신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, 국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에 집중 투자
  - (경제) AI 대전환, 신산업 혁신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, 지역균형 발전 등 공정한 성장 도모
  - (사회)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, 고용안전망 강화, 산업전환 훈련 지원 등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공동체 구현
  - (행정) 재난 예측·대응시스템 고도화, 민생침해범죄 근절 등 안전한 사회 구현
- ◇ 관행적·낭비성 사업 구조조정 및 지역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 등 재정운용 혁신을 통한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

- (경제분야) AI 대전환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, 광역교통 확충, 농어업 미래 산업화 및 선도형 R&D 투자 지원
  - (AI 대전환) AI 인재 확보·양성, 첨단 인프라 확보 및 쏠 산업 AI 전환 투자 등을 통한 AI 3대강국 실현 뒷받침
    - AI 해외 인재 유치 및 민관 협력 기반 AI 국가대표 양성, 모두의 AI 체감·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국민 AI 교육 실시
    -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GPU 확충, 수요 기반 데이터 확보·활용 지원,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등에 중점 투자
    - 쏠 산업의 AI 대전환(AI)으로 생산성·효율성을 극대화하고, 새로운 가치 창출에 집중하여 국가 전반의 新성장 기반 마련
  - (산업·중기·에너지) AI 대전환과 함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RE100 산단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 지원
    - AI·딥테크 등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하고, 소상공인 “폐업-재기-성장” 패키지 지원 강화

- (SOC) 지방권 광역 급행철도·지역거점 공항 건설 등을 통해 5극·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뒷받침
  - K-패스 정액권 및 어르신 유형 신설로 전국민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고, AI 기반 드론 국산화 등 미래 교통수단 고도화 지원
- (농림·수산) 스마트 농수산업 투자 확대, 북극항로 개척, K-푸드 경쟁력 제고로 농어업의 미래 산업화
  - 농업 직불금·수입안정보험 등 농어가 소득·경영 안전망 확충, 쌀 산업구조 개선 등 농수산물 수급안정 강화
- (R&D) AI 3강 도약, 첨단 바이오 기술 선점 등 명확한 성과 목표를 제시하여 국가 R&D 성과 제고에 주력
  - 소규모 파편화된 과제 연구 중심에서 국가 전략임무 중심의 대형 융합 연구 전환을 통해 R&D 투자 효율성 제고
  - 기술사업화 촉진, 첨단인재 양성,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기술-인재-인프라 R&D 혁신방안 마련

---

□ (사회분야)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, 취약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, 교육·돌봄 확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

---

- (보건·복지) 아동·어르신·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돌봄, 생애주기별 소득보전 확충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
  - 지역·필수·공공의료 투자 및 자살 예방 지원을 확대하고 K-바이오, K-뷰티,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뒷받침
  - 청년·신혼부부 등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및 금융지원 강화,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·의료지원 사각지대 해소

- (일자리) 취약근로자 대상 고용안전망 강화 및 AI 등 산업전환 훈련 지원,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에 역점 투자
  - 저소득층·청년 등의 안정적 구직·재도전 지원 및 사각지대 없는 산재·체불근로자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
  - 중소기업 재직자 중심 AI 접목 산업전환 훈련·인프라를 확충하고, 육아 병행 가능한 직장 조성 및 근로여건 개선 지원
- (교육) 교육세 배분구조를 개편하여 고등교육 및 영유아 투자 확대
  -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는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하고, 사립·전문대는 특성화 및 RISE 통한 동반성장 추진
  -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(3~5세)를 영유아특별회계(0~5세)로 확대·개편하여 무상교육·보육, 교사對 아동비율 개선 등 지원 강화
- (문화·체육·관광)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K-컬처 수출 및 경쟁력 강화, 문화격차 해소, 관광·스포츠 활성화 등 중점 지원
  - K-콘텐츠 수출강화 등을 위해 콘텐츠 생태계(자금·제작·인력양성·마케팅 등) 육성 및 글로벌 K-컬처 허브 구축을 단계적 확대
  - 생애주기 문화패스 도입 등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맞춤형 국민생활체육 및 외래관광객 유치 등 지원 강화
- (환경) 반복되는 수해 등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고, 2035 NDC(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)에 따른 부문별 탄소감축 지원
  - 도시침수·화학물질·오염 등 환경위해요인 최소화,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실현
  - 국제 탄소규범 대비 탄소감축 인프라구축 지원을 확대하고, 녹색금융 공급 확대 등 우리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 지원

---

□ (행정분야) 공공질서 확립, 재해예방 투자 확대 및  
국방역량 강화, 능동적 외교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

---

- (공공질서·안전) 민생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 
아동·여성·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
  -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 
재해예방 투자 확대 및 디지털 기반 재난대응 체계 고도화
- (국방) 3축체계 핵심전력을 지속 고도화하고, 국방 AI·드론 등  
미래 대비 첨단전력 투자 확대
  - 장병 의식주 등 복무여건 지속 개선으로 군 복무만족도 제고
- (외교·통일) 주요국 및 글로벌사우스 등과 양·다자 협력을  
강화하고, 공공외교 및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 강화
  - ODA 집행·성과관리를 강화하여 효율화·내실화하고,  
개도국 개발 지원과 국익을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
  -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하고,  
통일정책 국민 참여를 위한 사회적 통일대화 활성화 지원
- (일반·지방행정)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 
지역균형발전 투자를 확대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
  - 공공부문 AI 대전환 지원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
및 행정 효율성 제고 추진
  - 첨단전략산업 금융지원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하고  
취약계층 금융 및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

< 2025~2029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>

(단위 : 조원, %)

구분	'25	'26	'27	'28	'29	'25~'29 연평균
총 지출	673.3 (2.5)	728.0 (8.1)	764.4 (5.0)	802.6 (5.0)	834.7 (4.0)	5.5
1. 보건·복지·고용	248.7 (4.7)	269.1 (8.2)	285.5 (6.1)	300.6 (5.3)	313.5 (4.3)	6.0
2. 교육	98.5 (3.5)	99.8 (1.4)	106.0 (6.2)	110.5 (4.3)	115.1 (4.1)	4.0
3. 문화·체육·관광	8.8 (0.6)	9.6 (8.8)	10.0 (4.9)	10.5 (4.3)	10.8 (3.0)	5.2
4. 환경	13.0 (3.8)	14.0 (7.7)	14.5 (3.4)	14.9 (3.1)	15.3 (2.7)	4.2
5. R&D	29.6 (11.5)	35.3 (19.3)	37.3 (5.8)	39.4 (5.5)	41.4 (5.1)	8.8
6. 산업·중소기업 ·에너지	28.2 (0.7)	32.3 (14.7)	34.0 (5.2)	35.6 (4.6)	36.8 (3.4)	6.9
7. SOC	25.4 (△3.8)	27.5 (7.9)	28.6 (4.1)	29.7 (3.8)	30.1 (1.6)	4.3
8. 농림·수산·식품	25.9 (1.8)	27.9 (7.7)	28.9 (3.7)	29.9 (3.3)	30.5 (2.1)	4.2
9. 국방	61.2 (3.1)	66.3 (8.2)	69.7 (5.1)	73.2 (5.1)	76.2 (4.1)	5.6
10. 외교·통일	7.7 (2.3)	7.0 (△9.1)	7.3 (3.5)	7.5 (3.5)	7.7 (3.0)	0.1
11. 공공질서·안전	25.0 (2.3)	27.2 (8.8)	28.0 (3.0)	28.8 (2.9)	29.5 (2.4)	4.2
12. 일반·지방행정	110.7 (0.1)	121.1 (9.4)	126.7 (4.6)	135.1 (6.6)	141.9 (5.1)	6.4

---

## V. 재정혁신 추진방향

---

### 1 지출 구조조정

---

- (재량지출) 관행적 지출 효율화, 제도개선, 우선순위 조정, 집행부진·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재정사업 구조조정 추진
  -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 $\Delta 10\%$  이상 구조조정 목표 및 5년간 전체 재량지출 사업을 성과 위주로 재편
  - 특히, 집행부진·성과미흡 사업은 폐지하는 등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낭비성 지출까지도 철저히 점검
- (의무지출) 인구구조 등 정책여건 변화를 감안한 지원체계 현실화로 경직적 지출 비효율 제거
  - 반복·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

### 2 세입기반 확충

---

-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정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추진
  - 응능부담 원칙과 과세형평 및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담 정상화\* 및 과세체계 합리화
    - \* 법인세율 환원,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
  - 정책목적 달성, 과다·중복지원, 정책효과 미흡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·감면 제도 정비\*
    - \*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종료
  - AI 활용 세정효율화 및 제도개선\* 등을 통해 탈루세원 확보
    - \*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상속인 배우자, 직계비속 배우자 추가 등

## 성과관리 강화

- 성과목표관리 내실화 및 성과평가 체계 정비를 통한 재정사업 성과관리 실효성 강화
  -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계획서·보고서에 주요 세부사업 재정 성과 정보를 추가하여 예·결산 심사를 뒷받침
  - 재정사업평가를 성과·지출구조조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강화

## 예타제도 개편

- 기술환경 변화와 밀접한 R&D 사업유형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
  - 1천억원 이상 대규모 R&D 사업은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R&D 유형 및 특성에 맞는 사전점검(과기부) 실시
- 국가어젠다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타제도 정비
  - 초혁신경제·탄소중립·지역성장 등 전략적 적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체계 등 점검·정비\*

\* 예) 온실가스 감축 이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시 탄소 저감효과 반영을 확대

---

## 계약 · 조달 혁신

---

- 초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 국가계약제도 유연성 제고
  - 초혁신경제 뒷받침을 위해 정보화사업 등 신기술 관련 수의계약을 폭넓게 인정
  - 신산업 및 혁신기술 관련 공공계약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등 새로운 계약방식, 조건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
- AI·융복합 등 미래 첨단사업 분야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
  - 혁신기업의 금융지원 및 자격요건 완화 등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공공구매 및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 확보
  - 조달제도 개편을 통해 혁신기업의 국내 경쟁력을 제고하여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

---

## 보조금 운용 효율화

---

-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모니터링\* 및 부정수급 적발률이 높은 부처합동 현장점검\*\*을 지속 확대
  - \* 모니터링: ('24) 8,079 → ('25) 10,000건    \*\* 현장점검: ('24) 450 → ('25) 500건
  - 또한, 부처 자체 점검률이 낮은 기관들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특별현장점검\*을 매년 정례화
    - \* ('24.12月) 시범 실시 60건 → ('25) 100건 이상
- 부정징후 모니터링 패턴 고도화, 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 대상 부정수급 교육 강화\* 등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률 제고
  - \* 교육인원: ('24) 875 → ('25) 1,000명
- e나라도움과 연구비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양 시스템에서 동일한 집행증빙자료를 중복사용 할 수 없도록 검증체계 마련

## 민간투자 활성화

- 신유형 발굴, 사업여건 개선 등 민간투자 활성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 확충
  - 도로, 철도 등 전통적인 교통인프라 뿐만 아니라, 디지털 전환,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신유형의 사업모델을 발굴
  - 신규시설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에도 민간투자기법을 적극 적용하여 필수 인프라의 조기 확충 및 안정성 제고 추진
  - 건설·금융 비용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

## 국유재산 공공성 강화

-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청년창업 지원 강화
  - 노후 청·관사 및 도심 유휴 국유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추진하여 청년·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
  - 기존 창업공간 제공방식에서 청년창업정책(보육·사업화·투자·자금 등)과 연계된 창업생태계 조성방식으로 전환\*

\* 서울역삼('19년)·부산('22년)·대전('23년) + 수원·천안·영등포·대구 등 4곳 추가조성

- 국가·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  - 국가·지자체 간 협의체 기능을 확대\*하고 국가정책과 지자체 개발수요를 연계한 국·공유지 교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

\* (기존)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→ (개선) 중앙-지방간 국유재산 정책협의회

---

## 공공기관 자원 활용

---

-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고유업무로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
  - 공공기관 투자 촉진을 위해 구분회계 확산 등 맞춤형 재무관리 및 신속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지원
  - 공공기관의 기술·경영혁신을 촉진하고,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는 경영평가제도로 개편 추진
  - 기관 내 인력 재배치 등 핵심과제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

## 5 재정의 신뢰성·투명성 제고

---

---

### 재정의 지속가능성

---

- 성과 중심 재정운용과 지속적 재정 혁신, 재정 규율 등을 통해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
  - 성과 중심의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'적극재정 → 경제성장 → 지속가능 재정'이라는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 도모
  -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, 과세 정상화 등 지속적인 재정 혁신, 재정 규율 등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를 위해 노력
  -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저출생·고령화 등 미래 재정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재정안정화 방안 강구

---

## 국민참여 제고

---

-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하여 예산과정에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쌍방향·현장 중심 소통 등 다채로운 참여 기회 제공
    - 신규 예산사업 발굴 위주에서 더 나아가 기존 예산사업의 지출효율화 제안 등 집행점점까지 국민참여 범위를 확대
    - 예산국민참여단\* 규모를 확대하여 참여단 활동의 대표성을 강화하고, 청년·어르신·장애인 등 취약계층 참여 기회 확대
- \* 예산국민참여단: 참여예산 접수 제안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선호도 투표 등 참여  
- 참여단 확대(안): ('25現) 345명 → ('26계획) 600여 명 → ('27계획) 1,000여 명

---

## 재정이해도 제고

---

- 국민들이 재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 공개 확대 및 재정교육 활성화
  - 재정정보관리시스템(열린재정) 고도화를 통해 중앙 및 지자체 재정정보를 연계하여 일괄 통합 제공 추진
    - AI를 활용하여 국민의 재정정보 검색의 편의성을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재정정보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
  - 일반인 대상 이러닝 콘텐츠 확충,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 등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추진

**[1] 보건·복지·고용 분야**

-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빈틈없이 두툼한 사회안전매트 구축
  -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, 긴급복지 확대 등 사각지대 최소화
  - 돌봄·일자리·소득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
  - 한부모가정, 가족돌봄·고립은둔청년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
  - 보훈보상금 인상, 저소득 참전유공 배우자 지원 등 예우 강화
- 양육부담, 돌봄, 일·가정양립, 주거 등 저출생 반등 공고화
  - 아동수당 지급연령 단계적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지원
  - 직장·육아 병행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, 대체인력 등 지원
  - 아이돌봄 지원 확대하고 야간·농어촌 등 사각지대 보완
  -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육아친화플랫폼 확충
- 어르신 돌봄, 소득보장, 고령산업 육성 등 초고령사회 대응 강화
  -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
  - 노인일자리 지자체 주도 전환, 기초연금 부부감액 개선 등 소득보장 강화하고, 치매머니 관리 등 고령친화 산업 육성
- 지역·필수·공공의료 지속적 투자 확대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
  - 국립대병원·지역의료원 시설·장비 개선 및 취약지 지원 확대, 응급의료기관·중증외상센터 지원으로 최중증 치료역량 확충
  - 선진국 수준의 전공의 수련환경 구축 및 지역 의사제 등 지원
-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자살 예방 투자 확대

## 【참 고】 일자리 분야 '25~'29년 재정투자 중점

-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 투자
  - 저소득층·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강화, 지방 중소기업 채용 청년 및 고령자 계속고용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
  - 산업위기지역 일자리 문제 대응을 강화하고, 자생력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 강화
- 산재·체불·장애인 등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강화
  - 영세사업장 등에 산업재해 예방 필수인력·장비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 도모
  -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 범위 확대 등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, 근로감독관 증원을 통한 선제적 근로감독 강화
  -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중증장애인 채용을 유도하고, 근로지원인 확대를 통해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
- 직업훈련 재구조화를 통한 AI 산업전환 대응 투자 강화
  - 훈련 품질 제고 및 교육생 훈련 완수 유도 위한 내일배움카드 자부담-훈련장려금 재설계, 유사·중복 훈련 과정 정비
  - 청년 등 대상 AI 특화훈련 신설 및 중소기업 AI 전환 촉진을 위한 재직자 AI 과정·AX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에 재투자
- 일·가정 양립 지원 강화, 주4.5일제로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
 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및 대체인력·업무분담지원금 인상 등을 통해 누구나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
  - 중소기업의 주4.5일제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4.5일제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일·가정 양립 문화 확산
- 고용안전망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병행
  -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구직·재도전 지원
  - 고보기금 재정 건전화를 통한 장기적 지속가능성 제고

## (2) 교육 분야

- 교육세 배분구조를 개편하여 고등교육 및 영유아 투자 확대
  - 교육세 중 금융·보험업분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고, 나머지는 <sup>신설</sup>영유아특별회계(60%) 및 교부금(40%)으로 배분
  - ※ (기존)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(유특, '17~'30) : 만 3~5세 유아 대상 교육·보육비 지원  
(개편) <sup>신설</sup>영유아특별회계('26~'30) : 만 0~5세 영유아 대상 교육·보육비 지원
-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는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, 사립·전문대는 특성화 및 RISE 통한 동반성장 추진
  - 거점국립대별 집중육성 분야를 학부-대학원-연구소까지 패키지 지원하고, 지역대학과의 연구·교육협력 통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
  - 사립·전문대는 학사구조·교육과정 혁신 등 특성화를 지원하고, RISE 확대·재구조화 통해 지역·대학의 동반성장 강화
- AI 등 첨단분야 대학 교육혁신 및 이공계 학생 성장지원 강화
  - 첨단분야 대학 교육과정을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혁신할 수 있도록, 단기 집중교육부터 전공과정까지 지원 분야 및 투자 확대
  - 우수 이공계 학생의 취업·연구 및 박사후까지 전주기 성장 단계를 전폭 지원하여 핵심 인재의 전략적 육성 추진
- 특별회계 지원대상을 유아(3~5세)에서 영유아(0~5세)로 확대·개편하여 영유아 교육·보육 지원 강화
  - '25년 만 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·보육을 실현하고, 교사對 아동비율 개선, 틈새돌봄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
- 직업계고 취업·학업 연계 확대 및 한국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
  -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채용연계형 실습과정 확대 및 직업계고-전문대 간 교육과정 연계 지원
  - 재외 한국학교 지원 강화 및 해외 한국어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한국어 보급 확대

### (3)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

- 콘텐츠 수출 확대 및 예술분야(문학, 뮤지컬 등) 해외진출 강화, 글로벌 K-컬처 허브 구축 등을 통한 세계적 문화강국 실현 경주
  - 수출특화 펀드 중심 정책금융 재편·확대, 장르별 특화지원, 맞춤형 인재양성 및 AI 활용지원 등 콘텐츠 수출 확대
  - 제2의 토니상, 노벨문학상 발굴을 위한 순수예술 해외진출 지원, 재외문화기관 통합·거점화 등 K-컬처 전세계 확산·전파 뒷받침
- 문화패스 확대 및 우수한 공연·전시의 지방 확산, 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전 국민 문화향유 및 격차 해소 유도
  - 통합문화이용권·청년문화패스 단계적 지원 강화, 우수한 공연·전시 관람 기회를 지방에 충분히 제공 및 예술인 창작 환경 개선
- 편리한 국내관광 환경 조성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적극 지원, 지역관광 중점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·내수 활성화 뒷받침
  - AI 활용 개인 맞춤형 관광지·숙박·교통 등 안내시스템 도입, 외래객 대상 통합 관광패스 신설을 통해 한국관광 매력도 제고
  -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(반값여행) 신규 도입, 근로자 휴가지원 등 더 많은 국민들의 지방여행 동참 적극 유도
- 전 생애 맞춤형 스포츠 기회 제공, 전문체육인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,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 모두가 누리는 스포츠 문화 확산
  - 어르신 건강을 위한 스포츠프로그램 신설, 체육선수의 훈련여건 지속 개선 및 예비국가대표 훈련 신규 도입
  - K-POP 공연 및 스포츠이벤트 수요에 부합하는 중·대형 스포츠 복합 아레나 건립 및 폭넓은 스포츠 기회 제공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단계적 확충
- 국가유산에 대한 체계적·사전적 재난피해 대응 역량 강화 및 전 국민의 체험·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국가유산 가치 제고

#### (4) R&D 분야

- ABCDEF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R&D 성과 가시화 촉진

\* A(인공지능), B(바이오), C(문화콘텐츠), D(방사), E(에너지), F(첨단제조)

- 소규모 수탁과제를 경쟁 수주하던 출연연 PBS 제도를 폐지하고, 국가 임무 중심의 대규모 융합연구 체제(ISD) 전환

\* (기존) 2~3억원, 1,877개 과제 → (개편) 90~450억원, 100개 과제

\*\* ISD: 기관전략개발단(Institute Strategic Development)

- 시장 수요 중심의 기술사업화 지원 강화

- TIPS 사업 지원 금액 및 지원 기업 대폭 확대 등 민간 수요 기반의 투자 연계형 R&D 확대

- 프로젝트 기반\* R&D 사업화 보증 신설(25년 0.3조원, 5년간 10조원)

\* (현재) 기술력+매출액, 기업단위 대출 → (개선) 기술력+성장성, 프로젝트 대출

- 지방 및 신진 연구자의 연구 지속성 보장을 위해 풀뿌리 소액 연구 시설 등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(1.2 → 1.5만개)

- 첨단인력 확충 3대 프로젝트 추진

- (양성 Core in Korea) 첨단 분야 인재양성 규모 확대(2.7→3.1만명), 현장 기반 산학공동 연구 강화 추진

- (유치 Brain to Korea) 세계 최고 수준 투자를 통해 우수 기관 석학 등 세계 최대 규모 해외인재 유치

- (유출방지 Star in Korea) 집단·개인연구 지원 확대 및 연구자 사기 진작을 통해 우수인재 유출 방지 노력

## (5)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분야

- 첨단·주력산업 기반 고도화 및 유망산업 글로벌 진출 적극 지원
  - 반도체 첨단패키징, 이차전지 원료·소재 등 국내 공급망 강화
  - 조선·해양·항만·방산(동남권), 에너지·자율차·반도체(서남권), 첨단과학·산업(중부권) 등 지역주력산업 중점 육성
  - 韓·美 조선협력 확대 및 유통플랫폼과 연계한 수출지원
-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및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 지원
  -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자·보조 확대 및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정책용자·보증 강화
  - RE100 산단 조성 및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 등 전력계통 포화 지역의 안정성을 강화하고, 차세대 전력망 산업 육성 지원
- AI·딥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 혁신 스타트업 육성 강화
  -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하여, AI·딥테크 등 첨단분야를 대상으로 특례보증, 특화자금도 확충
  - 유니콘 브릿지 사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스타트업 파크 등 지역 창업 인프라 확충
- 소상공인 재기지원·근본적 경쟁력 강화 및 시장·상권 혁신 지원
  - 민간 역량을 활용한 상권 혁신 지원 및 지역 브랜드 전통시장 육성
  - AI활용, 수출지원 및 온라인 진출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소상공인 매출 신장 지원
  - 경영안정 지원, 점포철거비 인상 및 폐업자 전직·취업연계 수당 확대 등 재기지원 강화

## (6) SOC 분야

- (균형발전) 5극 3특 중심 교통 이동망 확충 + 도시 인프라 구축
  -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('26~'30) 등 도로·철도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균형성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청사진 수립
  - GTX-A·B·C의 차질없는 착·준공을 이행하고, 주요 권역별 광역급행철도(xTX)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 뒷받침
  - 가덕도, 새만금, 제주제2공항 등 8개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
  -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세종집무실·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촉진
- (안전) 국민의 교통위험 예방, 노후 기반시설 안전보장 강화
  - 싱크홀·포트홀 등 도로 위험에 따른 지하 지반탐사 지원 확대, 국도·고속도로에 대한 재해·사고 대비 도로유지 보수 보장 등
  - 노후 국가철도 시설의 유지보수·개량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, AI CCTV, IoT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AI·디지털 투자 강화
  - 글로벌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극한 호우·태풍 등에 대비하여 국가하천정비 등 수자원 부문 투자 지속
- (교통) 교통비 부담 경감, 교통 서비스 개선 등 교통편의 확대
  - 정액패스 신규 도입 및 K-패스 병행 운영으로 교통비 절감 기여
  - 도심지 철도 지하화, 도로 병목구간 개선 등 교통불편 최소화
  - 저상버스·콜택시 확대 등 장애인 등 교통 취약계층 편의 제공
- (혁신) 교통·도시 전반 AI 전환 + 신산업 혁신으로 해외수주 견인
  - AI 시티 기획·조성, AI 드론 국산화, AI 건축·신호 등 전환 투자
  - 생산성·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분야 스마트화 등을 지원하고, PIS 펀드 조성, EMU-370급 고속철 등 해외수주 기반 확보

## [7] 농림·수산·식품 분야

- 스마트화 및 세대전환 지원을 통해 우리 농어업의 생산 혁신
  - AI·데이터기반 첨단 R&D, 스마트팜·피셔리 민간 확산 지원, 창업·교육·금융 기반 강화 등 농어업 미래 성장 산업화 지원
  - 청년이 농어촌에 진입하여 새로운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거, 자금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강화
- 유통구조 혁신 및 수출 활성화로 K-푸드 가치사슬 확장
  - 온라인 도매시장 등 유통경로를 다양화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산지조직 규모화,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
  - 수출바우처·용자 지원 등 기업육성 패키지 지원 확대, 비관세·물류장벽 완화 및 新수출시장 개척 교두보 확보
- 소득안전망 확충 및 환경 개선 등 농어촌 지속가능성 제고
  - 인구소멸지역 대상 공모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 확대
  - 취약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등 농어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강화
  - 노후화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예방 SOC 투자 지속
- 전략적 수급 관리 강화로 농수산물 소비 안정 기반 조성
  -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,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친환경 직불, 공공비축농지 지원 확대
  - 농산물 비축 및 계약재배 확대, 사전 관측·강화, 쌀 소비 촉진 지원 등을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

## [8] 환경 분야

-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이행을 위해 녹색금융, 온실가스 감축설비 보조금 등을 통해 기존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
  - 국내기업의 탄소중립 투자유도를 위한 녹색금융 공급 확대
  -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의한 기업부담 완화, 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 강화
-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촉진,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내실화
  - 무공해차 보조금과 함께 용자·펀드·보험 등 금융지원을 다각화하여 무공해차 보급 확대, 충전인프라 내실화 추진
- 기후변화 영향으로 빈번해지는 수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,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
  - 하천 제방정비·준설 등 치수능력 확대, 선제적·과학적 홍수 정보 제공을 위한 AI 예보체계 고도화 등 치수안전 강화
  - 노후하수관로 정비, 하수처리장 설치, 노후상수도 개량 등 상·하수도 인프라에 대해 지속 투자하여 생활용수 확보·수질개선 노력
- 오염·유해 물질의 체계적 관리 및 폐기물의 안정적·위생적 처리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구현
  - 토양·수질·대기 등의 환경오염물질 관리 강화,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주력
  -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, 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폐자원 활용 저탄소 에너지 확보에 지속 투자

## (9) 국방 분야

- 北 위협 고도화에 선제적 대응 및 러·우 전쟁 교훈 토대로 미래전 양상 대비 신속한 최첨단 무기체계 전환 적극 지원
  - 핵·미사일 등에 압도적 대응을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지속 고도화
  - 현재 복잡한 국방 무기 획득체계 혁신을 통해 AI(인공지능) 기반 최첨단 무기체계의 신속 개발 지원
- 국방 R&D 혁신을 통한 첨단 군대 전환 적극 지원
  - 국방 R&D 체계를 민간의 AI 등 최첨단 우수기술이 국방 무기 체계에 연계되도록 개편
  - 최첨단 피지컬 AI(로봇·드론 등의 두뇌) 등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혁신·도전형 R&D 및 민·군 기술협력 R&D 투자 대폭 확대
- 글로벌 K-방산 4대 강국 진입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「범부처 K-방산 생태계 구축 및 육성방안」을 마련하여 체계적 지원
  - 국방 R&D 혁신과 연계 민간 우수 중소기업을 정부가 직접 찾아내 성장단계별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·확대
- 초급간부 처우를 지속 개선하고, 장병 인적투자 확대
  - 추가 보수인상률 적용, 단기복무장려금 확대,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 신설 등 초급간부 처우개선 중점 투자
  - 군 급식 질 제고, 지역상생장병특식을 지역상생자율특식으로 확대 개편, 신형 전투피복 전부대 보급 등 장병 복무여건 제고
  - 전장병 AI·드론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, 병 자기개발을 위한 원격강좌·e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병 교육·훈련 강화

## [10] 외교·통일 분야

- ODA 집행·성과관리를 강화하여 효율화·내실화하고, 개도국 개발 지원과 국익을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
  - 저성과·중복사업 정비,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 등 ODA 효율화·내실화 추진
  - 개도국 산업인재 양성, 공급망 기술협력, 가시성·효과성 높은 대형사업 등 국익 연계 실용적 ODA는 확대
- 외교 환경 변화 대응 및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외교 성과 창출 중점 지원
  - 미·일·중·러 4개국과 관계를 증진하고, 신정부 지역전략 수립 및 국제행사 개최 지원을 통해 외교 지평 확대
  - 기후, 안보, 기술 등 위기 등 국제사회의 글로벌 현안 논의
  -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등을 위한 지원 지속
-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남북 관계 개선 대비 남북협력기금 확대
  - 국민의 통일·대북정책 관련 공감·참여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통일대화 활성화 지원
  - 북한이탈주민 조기 사회적응과 안정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지원 프로그램 강화

## [11] 공공질서·안전 분야

- AI 기반 범죄수사, 영상·SNS 분석 등 수사역량을 강화하고, 경찰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대응체계 고도화
  - 가상자산 추적, 마약감정 시스템 등 수사역량 강화와 XR·VR 등 기술을 이용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
  - 신입경찰 충원 확대 등 인력 보강으로 치안공백을 해소하고, 저위험층 등 장비 보급으로 국민안전 확보 및 인권 보호
  - 저소득층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확대 및 심리치료 강화
- 사회·경제적 소외자를 위해 국선전담 변호인 증원 등 지원 확대
  - 한계기업·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한 회생법원 신설 (대구, 대전, 광주) 및 통합 도산 지원센터 운영 확대
- 기후위기·복합재난 선제대응을 위해 지역 맞춤형 재해예방 인프라 투자 확대 및 화재 예방·대응 등 국민 안전 투자 지속
  - 도시 침수, 급경사지 붕괴 등 지역 재해예방을 위해 지자체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재해위험지역정비 집중 투자
  - 노후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한 연기감지기 보급,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산림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 국민 생활안전 확보
- AI·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 및 온전한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 피해 복구 지원체계 강화
  - 재난 실시간 대응을 위한 드론-상황실 연계,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 안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에 투자
  - 재난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해 재난현장에 통합지원센터 구축, 온전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·재난대책비 확대

## [12] 일반·지방행정 분야

-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적극 지원
  -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바탕으로 정부·지자체 AI 서비스 확산 및 혜택알리미, 디지털지갑 등 국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
  - 시스템 노후장비교체,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행정 서비스 안정성 강화에 지속 투자
-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및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등 정책금융 공급 확대
  -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AI, 반도체,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금융지원
  -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미래세대 자산형성 지원
- 인구 소멸위기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의 자율성 강화
  -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대한 정부지원을 의무화·확대하고 국비지원율을 인상하여 안정적인 상품권 발행 추진
  -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(포괄보조) 규모 및 대상사업 확대
- 국민통합을 위한 과거사 등 극복에 국가책임 강화
  - 강제동원 피해자 국외 추모조형물 건립 및 유해발굴·봉환,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건립 등 실질적 명예회복 지원
  - 국가폭력 피해자·유족에 대한 트라우마치유시설 운영비 전액 국가지원 등 국가부담 강화

## 【별 첨】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

분 야	지 표	'25년	'29년
보건·복지 · 고용	▪ 아동수당 지급연령	7세	11세
	▪ 노인일자리 수(만명)	110	125
	▪ 국민연금 수급자 수(만명)	783	957
교육	▪ 집중 육성분야 전공별 세계대학평가 200위권 거점국립대 수(개)	-	3
	▪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양성인원 수(누적, 명)	4,550	34,590
문화·체육 · 관광	▪ 문화콘텐츠산업 매출규모(조원)	154('23)	215
R&D	▪ 기술사업화 보증 공급(조원)	-	10
	▪ 출연연 ISD 대형 과제(개)	-	500
	▪ 첨단 분야 인재(만명)	2.7	3.3
산업· 중소기업· 에너지	▪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(누적, 정격용량 기준, MW)	39,000	67,900
	▪ 연 수출 1천만불 이상 기업(개사)	2,586	2,900
	▪ 모태펀드 출자(조원)	1.1	1.4
	▪ 지역 거점형 대표상권(개)	-	257

분 야	지 표	'25년	'29년
SOC	▪ 지역 신공항 준공·개항(개소)	-	4
	▪ K-패스 가입자 수(만명)	246	500
	▪ AI 시범도시(개소)	-	3
농림·수산 ·식품	▪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실적(조원)	1.0	5.5
	▪ K-푸드 수출 실적(억\$)	105	140
환경	▪ 온실가스 총 배출량(백만톤)	646.5	560.3
	▪ 노후 하수관로 정비율(%)	45.3	76.4
국방	▪ 방위력개선비 비중(%)	29.1	30.4
	▪ 군 급식단가	일 1.3만원	일 1.4만원
	▪ 장병 AI 소양교육 이수자	3만명	47만명 (전장병)
외교·통일	▪ 남북협력기금 규모(억원)	8,008	10,025
공공질서 ·안전	▪ 보이스피싱 피해액(억원)	12,726	7,398
	▪ 실화재 훈련 시설(개소)	6	9
일반·지방 행정	▪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개방(건)	-	40
	▪ 국민성장펀드 규모(조원, 누적)	-	80
	▪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(조원)	-	1.15+a